

‘김건희 특검법’ 4~5일 재표결...국힘 이탈 8표 나올까

野, 지역화폐법 등 국감전 표결 방침...여야 힘겨루기 재연 與 “똥똥 뭉쳐 폐기” 단일대오 단속...악화된 여론은 부담

정부가 지난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의 재가 시한(4일)을 고려하면 재표결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

재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회는 오는 4일 또는 5일이 유력시된다. 윤 대통령이 시한이 되기 전에 재가할 경우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에 부치고, 4일 늦게 재가해 당일 개회가 어려울 경우 토요일인 5일이라도 본회의를 여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된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재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10월 10일 전에는 특검법이 공포가 되면 되지 않든, 가결되면 부결되면 그것을 확정지어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재표결에 부쳐진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 의원 전원 출석을 가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회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4건 중 수정안으로 합의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을 제외하면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되

거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방송 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모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단일대오’로 뭉쳐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부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여당의 책무”라며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똥똥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는 당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당 내 이탈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에서 이탈표가 8명만 나오면 법안은 의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경우 특검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지역화폐법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이탈표는 없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정광재 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특검법 관련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명백한 법리적 이유가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표결의 가·부과 무관하게 이를 통해 대외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린 뒤 국정감사에 돌입해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한 의혹들을 집중적으



정부의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을 규탄하며 야당 5명의 의원들이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왼쪽부터), 김용민, 권향엽, 노종면 의원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로 파헤칠 태세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거나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서 특검법을 보강해서 재발의하거나 국정조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당정 지지율 출범 후 최저...2주 남은 재보선 위기감

리얼미터尹 지지율 25.8%·국힘 29.9%...의정 갈등 등 악재 산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시에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 ±2.0%포인트)해 지난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를 기록했다. 지난 26~27일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9.9%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모두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갤럽이 9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국민의힘은 28%를 기록했다. 이후 반등하긴 했지만, 역시 정부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총선 참패와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에도 당정의 지지율이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데는 김건희 여

사 리스크,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게 당정 지지율에는 악재로 꼽히고 있다. 김 여사 문제를 집요하게 건드릴수록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본 야당은 특검법 추진과 국정감사 증인채택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거나 수사 중인 사안을 야당이 ‘정쟁용’ 또는 ‘방탄용’으로 악용한다고 방어막을 치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김 여사 사과 여부를 두고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 부분은 사과라든가, 어떠한 매듭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사과 한마디 하면 야당은 국감에서 ‘잘못을 시인했다’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한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것도 당정의 ‘무능’으로 비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도 대대 정원과 협의체 참여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양보 없는 힘겨루기만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중재 과정에서 정부와 ‘불협화음’을 드러내며 오히려 당정 갈등 양상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에 따른 당내 위기감은 당장 2주 앞둔 재·보궐선거에 대한 불안감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번 재보선은 기초단체장 뽑는 4곳 중 2곳은 여론조사 ‘이긴 하지만 총선 이후 민심이 실제로 드러나는 풍향계이기 때문에 당에선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초 단체장을 뽑는 4곳 중 2곳은 여론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치러지지만, 최근의 당정 지지율 하락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 차원 명예회복 필요”

피해자 모임 ‘열매’ 증언대회...피해자들 아직도 후유증 시달려

5·18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대국민 조사보고서를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종료했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18이 국가가 자행한 국가 폭력의 만큼 정부 차원의 피해자 치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는 지난 30일 국회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용기와 응답’을 열었다.

5·18 당시 도청 학생 수습 대책위원회 활동을 한 김선숙씨는 당시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김씨는 “연행된 후 광산경찰서에 구금돼 있었고 상무대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조사를 받기 위해 군용차량을 타고 상무대로 이동해야 했는데, 수사관이 이동 중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눈빛이 반복되는 꿈을 자주 꾸는 등 후유증이 시달렸다.

5·18 임신 3개월의 임신부였던 최경숙씨는 차량을 침입한 계엄군 2명에게 성폭행당했다.

최씨는 계엄군에게 나뉜 땀 냄새와 숨 냄새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늘 냄새에 예민했다. 그저 자신이 민감하다고 여겼지만 이 역시 피해 후유증이었다.

그는 군복만 봐도 어지럽고 구토가 몰려왔고,

두 아들이 군복을 입는 것도 싫어 의무경찰로 입대 시켰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18을 국가 폭력으로 인정하고 지난 6월 대정부 권고 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피해자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경희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은 “5·18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체·정신·사회 관계적 영역에서 복합적 후유증을 겪어 왔다”며 “국가는 4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피해자들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주체이며, 군과 경찰 등 국가권력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